

'19년도 제68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2 교 시

- 객 관 식 [분야별 필수] -

목 차

<과 목(1)>

【행 정 학】 (일반)	1
【형사소송법】 (세무회계, 사이버)	5

<과 목(2)>

【경찰학개론】 (일반)	12
【세 법 개 론】 (세무회계)	18
【정보보호론】 (사이버)	23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본인이 응시한 분야의 해당과목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순서대로 채점이 되니, 순서를 바꾸어 표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인 재 개 발 원

경찰인재개발원 : <http://www.phrdi.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12.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효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말한다.
 - ② 성숙효과는 실험기간 중 실험집단의 특성이 변화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외적 타당성 저하 요인이다.
 - ③ 호돈효과는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외적 타당성 저하 요인이다.
 -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13.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용효과분석에서 효과는 물건이나 용역의 단위 또는 측정 가능한 효과로 나타내어진다.
 - ②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 ③ 비용효과분석은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 ④ 비용효과분석은 측정대상이 이질적이어도 효과성만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14. 아래에 제시된 정책결정 모형인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불명확한 기술’이란 정책 행위자들이 정책문제에 대하여 모호하게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문제성 있는 선호’란 정책 행위자들의 선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유동적 참여’란 정책 참여자들이 정책 과정에 있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정책결정에 필요한 요소로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이 있으며, 이 흐름들이 상호 연관되어 결합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15. 드로(Dror)의 최적모형에서 설명하는 상위정책 결정 단계와 관련이 없는 요소는?
- 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동기부여
 - ② 자원의 조사, 처리 및 개발
 - ③ 정책 결정 체제의 설계, 평가 및 재설계
 - ④ 문제, 가치 및 자원의 배분
16. 정책딜레마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안들이 상충되고 각각 기회손실이 비슷한 경우에 발생한다.
 - ② 갈등 집단들의 내부 응집력이 강할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
 - ③ 갈등 당사자들이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조장한다.
 - ④ 정책문제의 재규정은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식이다.

1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선관료들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한다.
 - ② 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③ 객관적 성과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여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다.
 - ④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18. 아래에 제시된 조직구조 특성 중 유기적 구조의 특성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분업적 과제	나. 성과측정이 용이
다. 넓은 직무 범위	라. 표준 운영절차
마. 권위의 정당성 확보	바. 예측가능성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대프트(Daft)의 조직유형 중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분업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므로 부서와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②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므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여 성과관리에 유리하다.
 - ③ 조직구성원들에게 자율관리, 의사결정권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사기와 직무동기 부여에 기여한다.
 - ④ 특정기능별로 최고의 품질과 최저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매우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20. 아지리스의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머슬로의 5단계 욕구계층설을 수정해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눈다.
 - ② 인간의 욕구를 불만과 만족이라는 상호 독립적인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면서, 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없는 상태로, 불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
 - ③ 동기가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욕구 중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들을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 욕구로 분류했다.
 - ④ 공식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21. 직위분류제의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직위(position) —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나. 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는 물론 직무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모두 유사한 직위의 집단
다. 직군(group)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무들을 묶은 것
라. 직류(sub-series) —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유사한 직무의 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직접 생산하되 수단은 민간의 시장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 ② 신공공관리론 원리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민영화 수단이다.
 - ③ 담당하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 ④ 일반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예산과 인사관리의 재량권이 있다.

23.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구조적 상황론에 따르면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직관리자의 역할이 수동적이다.
나.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이다.
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라.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외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 전략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조의 변화가 외부환경 변수보다는 조직 내 정책결정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마
- ③ 가, 다, 라, 마 ④ 나, 다, 라, 마

24.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을 지닌다.
- ② 정책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2종오류라 한다.
- ③ 정부 내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화를 하는 경우를 허쉬만은 ‘강요된 정책문제’라 하였다.
- ④ 일반대중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문제를 체제의제라 한다.

25.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공공서비스의 성과지표와 산출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성 과 지 표	경 찰 부 서 의 산 출 방 법
투 입	조 사 활 동 에 투 입 된 경 찰 및 차 량 규 모
과 정	A
산 출	B
결 과	C
영 향	D

가. 범죄율 감소 나. 범인 체포 건수
다. 담당 사건 수 라. 지역사회 안전성

- ① A-다, B-가, C-라, D-나 ② A-다, B-라, C-나, D-가
- ③ A-다, B-나, C-라, D-가 ④ A-다, B-나, C-가, D-라

26.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근무성적평정 요소에는 직무수행실적과 개인의 능력 외에 태도도 포함할 수 있다.
나.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 간 비교에 용이하다.
다.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과학적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평정의 결과가 점수로 환산된다.
라. 평정오류 중 집중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 배분법이 활용될 수 있다.
마. 우리나라는 이중평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면평정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고 있다.
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는 금지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예산의 원칙 중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를 의미하는 원칙은?

- ① 예산 통일의 원칙 ② 예산 총계주의 원칙
- ③ 예산 단일성의 원칙 ④ 예산 한정성의 원칙

28.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확립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 ②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와 폐쇄형 임용체제를 중요시 한다.
-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지속성,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 ④ 직업공무원제는 인재 채용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한다.

29.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의 장점은 의사결정의 신속화에 있다.
- ②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인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부처조직형)이다.
- ③ 비독립단독형(부처조직형) 중앙인사기관의 장점은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있다.
- ④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을 통해 타 기관과의 밀착을 방지하고 원만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30. 직무평가 기법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분류법은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등급기준표와의 비교를 통해 등급을 결정한다.
나. 요소비교법은 대표적인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직무를 비교하는 비계량적 평가법이다.
다. 서열법은 직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서열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평가법이다.
라. 분류법과 점수법은 직무와 등급기준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분류법은 계량적, 점수법은 비계량적 평가를 시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나, 라

31. 공직 윤리 및 행동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 ③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적용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5년간 그가 퇴직 이전에 3년간 속해있던 소속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 ④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3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 ② 중층제는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를 어렵게 한다.
 - ③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④ 단층제는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크다.

33. 예산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예산이란 행정부가 편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후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 ③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출항목은 한정적이다.
 - ④ 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34.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향적 예산편성과 달리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
 - ② 예산 총액이 먼저 결정된 후 분야별 예산의 배분이 결정된다.
 - ③ 예산 운영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이 필요하다.
 - ④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35.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자기검증기능을 갖는다.
 - ② 현금주의는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 ③ 복식부기에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위치한다.
 - ④ 발생주의는 무상거래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36. 다음의 예산집행의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 중 신축성 확보방안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예산의 재배정	나. 총액계상예산
다. 예산의 전용	라. 계속비
마. 총사업비 관리	바. 예비타당성 조사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세계 최초로 실시한 도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이다.
 - ②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 ③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심의과정에 참여한다.

38.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집행하고자 중앙부처가 설치하는 일선기관이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부처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39. 행정통제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사법부에 의한 통제
나. 교차 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다. 시민에 의한 통제
라.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마.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바.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 → 주민투표제 → 주민소환제 → 주민소송제」 순으로 법제화되었다.
 - ② 주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다.
 - ④ 주민소송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며, 다수 주민의 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②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④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2. 법원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라.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24일 가량을 앞둔 제1심 제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법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다.
- 마. 법원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②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것은 위법하다.
-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법령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배우자는 수사 중인 긴급체포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다.

4.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중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가. 형사보상청구권 |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
| 다. 증거보전청구권 | 라. 헌법소원권 |
| 마. 불이익진술거부권 | 바. 이의신청권 |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5.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
- ②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이자 자수에 해당한다.
- ④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도 친고죄의 공범자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6. 피고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②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면 피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
- ③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진행되었다면 법원은 별도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 ④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이전에 이루어진다.

7.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 ③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피고인의 母가 이를 수령한 바 있다면 위 송달은 유효하다.
- ④ 주소,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8. 통신제한조치와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②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수사목적상 2월을 초과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다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중대한 범죄가 실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음모단계에 있는 경우라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 당사자 일방만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9.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②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 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친다.
 - ③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 ④ 상소심에서 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고소인은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10.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절차에 있어서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 ②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차·구금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 ③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며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형집행장은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11.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 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12. 사법경찰관 甲이 2018. 9. 1. 23:30에 乙을 살인죄로 긴급체포한 후의 조치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甲은 乙이 보관하는 식칼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9. 2. 22:00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나. 甲은 긴급압수 한 식칼을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다. 甲은 9. 3. 23:30까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라. 甲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乙을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만 70세 이상인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라.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
마.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증거보전의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나.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전·후를 불문한다.
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해야 한다.
라.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신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과 압수·수색에 한한다.
마.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복사 또는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압수목적물인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할 수 있다.
 - ③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된다.
 - ④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다.
1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라.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마.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가환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압수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가환부를 받은 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압수물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압수물을 처분할 수 없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 ③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다.

18. 사기사건 피의자 甲은 2018. 8. 17.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8. 8. 18.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8. 8. 19. 10:00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8. 8. 20. 14: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 ① ㉠ 2018. 8. 20. 10:00 ㉡ 2018. 8. 27. 24:00
 ② ㉠ 2018. 8. 21. 14:00 ㉡ 2018. 8. 27. 24:00
 ③ ㉠ 2018. 8. 21. 14:00 ㉡ 2018. 8. 29. 24:00
 ④ ㉠ 2018. 8. 21. 24:00 ㉡ 2018. 8. 29. 24:00

19.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나. 검사의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이 위법할지라도 기록상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다.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라.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수사의 종결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
 - ③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21. 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신청을 할 수는 없다.
- 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라.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마.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2.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것 이외에는 이에 대해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 ③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3.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흥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흥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면, 그 변경전의 공소사실과 변경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위법하다.

③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석유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는 필로폰 무상교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甲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 등을 교부 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은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및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4.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나.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각 자술서 및 이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 라.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5.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 ② 감정유치에 관한 결정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③ 구금장소의 임의변경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허용된다.
- ④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6. 공소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나.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 다.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판정에서 구술로써는 할 수 없다.
- 라. 공소의 취소는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검사만이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한다.
- ② 공소가 제기 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 ④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8. 공개주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안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나.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을 비공개 할 수 있다.
- 다.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 이유에 해당한다.
- 라. 소년의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 마.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방청석만큼 방청권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거나 위험물 등을 가진 자의 입정을 금지하는 것은 공개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B가 A로부터 들은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에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피고인 甲이 증거 부동의 하는 경우, A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대화내용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다라도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C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A가 보낸 피해 내용의 문자정보를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A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그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아버지에게 보낸 것과 같다고 확인하였다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어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검사가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 甲의 협박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피해자 A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의 협박 문자정보를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위 문자정보는 피해자 A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만일 A가 피고인 甲과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여 그 녹음테이프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공판기일에서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여도 A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0.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인정될 수 없다.
- ③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1.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인감증명	나. 의사의 진료부
다. 전과조회보	라. 감정서
마. 수사보고서	바. 민사판결문 사본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3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 ②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③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④ 몰수, 추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지만, 추정액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3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판례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4. 재판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상습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미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처단되었을 것이 필요하다.

- ③ 17개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중 일부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 확정 전의 다른 일부 기간의 행위가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 ④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 시점이다.

35. 상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다.
- ②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한층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
- ③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요지만 기재한 채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전에 심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36.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나.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라.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 유치기간만이 길어진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청구사건을 심판하더라도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③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38. 재판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 ②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 ③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④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함이 없이 치료감호소로 위탁하여야 한다.

39.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소장일본주의	나. 자백배제의 법칙
다. 구두변론주의	라. 직접심리주의
마. 자유심증주의	바. 자백의 보강법칙
사. 전문법칙	아. 증거재판주의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40. 소년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 ③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없으나, 다만 보호처분 계속 중 본인이 처분당시에 19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할 수 있다.
-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산정할 수 없다.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협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협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협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한다.
- ② 위협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협, 위협혐의, 오상위험으로 구분된다.
- ③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 ④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 ③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④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3. 일제 강점기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1910년 일본은 통감부에 경무총감부를, 각 도에 경무부를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총감부의 직할로 하였다.
- 나.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경찰은 도시나 개항장 등에,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또는 의병활동 지역 등에 배치되었다.
- 다.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 총독부 직속 경무총감부는 폐지되고 경무국이 경찰사무와 위생사무를 감독하였다.
- 라. 3·1운동을 기화로 치안유지법을 제정, 단속체계를 갖추었다.
- 마. 일제 강점기의 경찰은 일본 식민지배의 중추기관이었고,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제령권 등을 통하여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는 예외)
- 다.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라.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위 '라'와 관련,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바.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기가 올바르게 묶인 것은?

- 가. 1947년 경찰병원 설치
- 나.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 다. 1956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 라. 1966년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 마. 1970년 경찰공무원법 제정
- 바.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 사. 1996년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 아. 2005년 제주도 자치경찰출범

- ① 가, 나, 사, 아
② 가, 라, 마, 아
③ 나, 라, 바, 아
④ 나, 라, 바, 사

6.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 ② 법규명령의 형식(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 ③ 재량준칙의 제정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청이 기속권만을 갖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7.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기구이다.
 나.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라.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마.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1개월 이내
 나.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채용기간(단,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2년 이내로 한다)
 다.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2년 이내(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년 이내
 마.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1년 이내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보기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종교중립의 의무
 나. 복종의 의무
 다. 비밀엄수의 의무
 라. 친절·공정의 의무
 마. 정치운동의 금지
 바. 법령준수의 의무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0.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상 경찰의 인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마.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바.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분사기·최루탄 등에는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을 제외)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이 있다.
 - ④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I 급, II 급, III 급 비밀로 구분된다.
 나.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II 급 비밀로 분류한다.
 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접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라.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마. 국가정보원장은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다.
 바.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나.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다.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마.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i)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ii)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iii) 경찰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④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15.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Glaser는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고 하였다.
- ② Miller는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 ③ Reckless는 좋은 자아관념은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 ④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며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③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8. 「경비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 ③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④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9. 다음 보기 중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종류와 그 업무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가.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나.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주민여론 및 범죄정보 수집
라.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 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 ① 가-순찰근무 나-행정근무 다-상황근무 라-순찰근무
② 가-상황근무 나-상황근무 다-순찰근무 라-경계근무
③ 가-상황근무 나-행정근무 다-상황근무 라-순찰근무
④ 가-순찰근무 나-상황근무 다-순찰근무 라-경계근무

20.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나.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라.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마.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 ②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다.
- ③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나.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 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라. 아동, 7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아동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인지성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 ② 응급조치상의 격리란 아동학대행위자를 48시간(단,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을 기한으로 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 ③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권한 또는 자유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조치이다.

2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 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 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라. 피의자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심각단계에는 재난상황실을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다만, 그 밖의 단계에는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경계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 ③ “관심단계”는 일부지역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 ④ “주의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2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무엇인가?

- ① 규제표지 ② 지시표지
- ③ 주의표지 ④ 보조표지

27. 「통합방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 나.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 다. “을중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라.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중상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8.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③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29.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②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④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30.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 나.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i)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ii)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iii)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 라.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1. 정보를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다음 보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정보는?

-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한 평가 정보로서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의 결정에 필요한 사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① 기본정보 ② 판단정보 ③ 현용정보 ④ 보안정보

32. 정보의 순환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정보의 순환과정 중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는 정보 생산단계이다.
- 나. 첩보수집단계의 소순환과정은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명령·하달 → 사후검토 순이다.
- 다. 정보생산단계의 소순환과정은 선택 → 평가 → 기록 → 분석 → 종합 → 해석이다.
- 라. 정보의 순환은 연속적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 마. 정보배포의 원칙 중 ‘보안성’이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바. 정보배포의 수단 중 ‘특별보고서’는 어떤 기관 또는 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방법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 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경찰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 소음이 있을 때 소음의 측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소음기준은 주간 ()dB 이하, 야간 ()dB 이하이다.

나. 그 밖의 지역의 소음기준은 주간 ()dB 이하, 야간 ()dB 이하이다.

다.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라.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 ① 280 ② 290 ③ 300 ④ 310
35.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차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이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 요청을 한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나. 위장탈출 혐의자

다.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라.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 ① 반국가단체구성죄(제3조) ②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 ③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④ 잠입·탈출죄(제6조)

38.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상륙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긴급상륙 -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관광상륙 - 외국인승무원이 승선 중인 선박 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할 때
 - ③ 재난상륙 -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④ 난민임시상륙 -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한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①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수사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 ②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40. 「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나.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라.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마.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마
- ③ 나, 라, 마 ④ 나, 마, 바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②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 끝난 날 후에도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이내이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
2.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할 때 국세의 우선징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단, 소액임차보증금채권 및 임금 관련 채권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나. 국가의 조세채권은 공과금보다 우선한다.

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민사채권보다 그 민사채권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라.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담보에 관계된 국세·가산금·
채납처분비는 다른 국세·가산금·채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① 가, 나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라

3.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 청구에서 청구사유에 해당한다.
4.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④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결정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불복하는 청구인의 대리인은 특별한 위임이 없어도 본인을 위하여 청구의 취소를 포함하여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 ②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7.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영리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지만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②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모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 ④ 외국정부는 비과세법인으로 국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8. (주)A는 제10기 사업연도가 2018. 1. 1. ~ 2018. 12. 31.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주)A의 당기말 현재 미완공 상태인 공장의 신축공사에만 참여하고 있는 임원 甲의 2018년 인건비(일반급여 ₩50,000,000, 상여금 ₩30,000,000)가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되어 있다. 임원 甲의 상여금 중 ₩7,000,000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인 경우, (주)A의 제10기 세무조정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7,000,000 (상여)
 - ②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80,000,000 (유보)
 - ③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7,000,000 (상여)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23,000,000 (유보)
 - ④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7,000,000 (상여)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73,000,000 (유보)
9. 「법인세법」상 익금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법령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한다.
 - ④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 항목이다.
10. 「법인세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주회사가 79%로 출자한 자회사가 비상장기업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80%를 익금불산입한다.
 - ② 지주회사가 39%로 출자한 자회사가 비상장기업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80%를 익금불산입한다.
 - ③ 지주회사가 49%로 출자한 자회사가 주권상장기업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불산입한다.
 - ④ 지주회사가 39%로 출자한 자회사가 주권상장기업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80%를 익금불산입한다.
11. 「법인세법」상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자는 해당 이자를 부인순서 1순위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며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 ② 비실명 채권이자자는 해당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 ③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이자자는 해당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 ④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자는 관련 지급이자 해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12. 「법인세법」상 자산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고자산으로서 파손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고정자산으로서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의 사유로 파손된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 ③ 특수관계인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해당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 ④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13.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자산과 일시적 조업중단에 따른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 ②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가초과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일반적인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사항이므로 과소계상액은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면 인정된다.
 - ④ 개발비의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균등안분액을 상각한다.

14.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나.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다. 부동산 -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라. 유가증권 -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 ③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 ④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6.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 가액 중 높은 금액을 시가로 한다.
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2억 원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②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법인세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받은 외국세액은 해당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계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다.
 -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다.
 - ④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산출한 공제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18.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은 연결의 대상인 완전자법인이 될 수 없다.
 - ③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 ④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 다음 중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에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구성원과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 ②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③ 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에서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 ④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재단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재단은 법인으로 본다.
20. 「소득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초과반환금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②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는 과세연도의 종료시를 수입시기로 한다.
 - ③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처분일로 한다.
 - ④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23.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②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도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선급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24.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②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③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위약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25.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및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가 포함된다.
 - ③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게도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④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6.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가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자산을 12억 원에 매입하였다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②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2인이 같은 손익분배비율로 공동경영하는 과정에서 매출 10억 원, 필요경비 8억 원이 발생하였다면, 각 공동사업자는 각자 별도로 매출 5억 원, 필요경비 4억 원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④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2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되, 이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 ②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해당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 ③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주유소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판매용 휘발유를 주유소의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에 주유한 경우
 - ② 자동차 세차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세차기계를 이용하여 자녀의 차량에 대하여 무료 세차를 해 준 경우
 - ③ 시계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판매용 시계를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증여한 경우
 - ④ 컴퓨터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판매용 컴퓨터를 판매하지 못하고 폐업한 경우
29.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②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③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④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0.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②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재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재화의 시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작성 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라.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이지만,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과세이다.
 - ②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는 면세이지만, 광고는 과세이다.
 - ③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이지만,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은 과세이다.
 - ④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이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이다.
3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④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4.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있어서 사업장은 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 나.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다만, 그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다.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신청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말하며,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 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므로 거래의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5.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17. 10. 1.에 과세사업용 기계를 취득가액 ₩100,000,000(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이다.)에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18. 10. 1.부터 면세사업용 기계의 고장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하였다. 과세사업용 기계를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함에 따른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은 2017년 제2기는 80:20, 2018년 제1기는 70:30, 2018년 제2기는 60:40이다.)

- ① ₩1,500,000 ② ₩2,000,000
 ③ ₩3,000,000 ④ ₩5,000,000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상속세 연부연납은 납세의무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 ③ 상속세 연부연납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 ④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붙는다.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이 외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 ②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 ③ 유언을 통하여 증여자 사후에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 ④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도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8.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세목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취득세 ② 자동차세
 ③ 지역자원시설세 ④ 레저세

39. 「국세징수법」상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
- 나.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 다.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라.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 마.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0. 「국세징수법」상 압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②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③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 ④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정보보호의 목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밀성(Confidentiality)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로는 암호화, 접근제어 등이 있다.
- ② 가용성(Availability)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③ 가용성(Avail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 위협 요소 제거 등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무결성(Integrity)은 특정한 작업 또는 행위에 대해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말한다.

2. 암호 해독 공격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암호문 단독 공격(Ciphertext Only Attack)은 암호문만을 가지고 평문이나 키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암호문의 통계적 특성 등을 추정하여 해독하는 방법이다.
- ② 알려진 평문 공격(Known Plaintext Attack)은 평문에 대응되는 암호문을 약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암호문에 대한 공격을 하는 방법이다.
- ③ 선택 평문 공격(Chosen Plaintext Attack)은 암호 해독자가 암호기에 접근할 수 있어, 적당한 평문을 선택하여 그 평문에 해당하는 암호문을 얻어 키나 평문을 해독하는 방법이다.
- ④ 선택 암호문 공격(Chosen Ciphertext Attack)은 해독자가 암호기와 복호기에 모두 접근할 수 있어, 선택한 암호문에 대한 평문과 선택한 평문에 대한 암호문을 얻어 키나 평문을 해독하는 방법이다.

3. 블록 암호 모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ECB(Electronic Code Book) 모드는 평문을 동일한 크기의 평문블록으로 나누고, 키로 암호화하여 암호블록을 생성한다.
- ② CTR(CounTeR) 모드는 평문블록의 암호화를 병렬적으로 처리 가능하다.
- ③ CBC(Cipher Block Chaining) 모드는 인증을 수행하는 대칭키 암호 시스템의 하나인 Kerberos 버전 5에서도 사용된다.
- ④ CFB(Cipher Feed Back) 모드에서 이전 블록 값의 최상위 비트에서 발생한 에러는 이후 블록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다음 중 AES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Feistel 구조의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 ② 128비트 블록 단위의 암호화를 수행한다.
- ③ 사용 가능한 암호키의 길이는 총 3종류로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가 있다.
- ④ 암호키 길이가 128비트인 경우 라운드의 횟수는 10회이다.

5.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만 묶인 것은?

- ① RSA, ElGamal ② FEAL, AES
- ③ SEED, DES ④ ARIA, IDEA

6.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MAC에 대한 재전송 공격(Reply Attack)은 순서 번호(Sequence Number) 사용, 타임스탬프(Timestamp), 비표(Nonce) 등을 사용하여 막을 수 있다.
- ② HMAC(Hashed MAC)은 일방향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메시지 인증 코드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 ③ MAC은 제3자에 대한 증명, 부인방지를 해결할 수 없다.
- ④ HMAC(Hashed MAC)에 사용되는 일방향 해시함수는 교체가 어려워 다른 해시함수를 사용할 수 없다.

7. 전자 서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전자 서명의 요구조건으로는 재사용 가능과 서명자 인증이 있다.
- ② 전자 서명에서 메시지를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하는 것이 서명 작성에 해당되고, 그 암호문을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호화하는 것이 서명 검증에 해당한다.
- ③ 전자 서명을 통해 메시지의 기밀성이 보장되는 통신을 할 수 있다.
- ④ 전자 서명으로 부인은 방지할 수 있지만, 내용 변경 행위를 검출 할 수는 없다.

8. 다음 지문은 윈도우 운영체제의 주요 하이브 레지스트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HKEY_CURRENT_CONFIG는 시작 프로세스에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나. HKEY_LOCAL_MACHINE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 정보를 포함한 시스템 설정 정보를 갖고 있다.
 다. HKEY_CLASSES_ROOT는 파일 확장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라. HKEY_USERS는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쿠키(Cooki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쿠키는 사용자가 인터넷 웹 사이트에 방문할 때 생기는 8KB 이상의 파일을 말한다.
- ② 쿠키는 유효기간, 패스, 도메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③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 방문하면 웹 사이트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만든다.
- ④ 쿠키는 단순히 정보를 담고 있는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는 없다.

10. 다음의 명령어를 실행한 파일의 접근 권한으로 옳은 것은?

chmod 733 test.txt

- ① -rwxrwxrwx ② -rwxr--r--
- ③ -rwx-wx-wx ④ -rwxr-xr-x

11. 시스템에 상주하는 프로세스 정보를 알려주는 명령어는?

- ① df ② file ③ find ④ ps

12.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관리자(root) 권한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에 소유자가 관리자(root)로 되어 있으면서 ()가 설정된 경우에는 시스템의 보안에 허점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이것이 설정된 파일은 백도어 및 버퍼 오버플로우 등 여러 공격에 이용된다.

- ① SetGID ② SetUID
③ Sticky Bit ④ umask

13. 악성코드 중 자기복제 기능은 없지만, 다른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공격하는 악성코드는?

- ① 바이러스(Virus) ② 웜(Worm)
③ 님다(Nimda) ④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14. OSI 7 계층 중 계층과 데이터 전송단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Application - Packet ② Transport - Segment
③ Network - Frame ④ Data Link - Data

15. 다음 무선랜 보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TKIP는 64비트의 확장된 길이의 초기벡터(IV)를 사용한다.
나. WEP 인증은 양방향 인증을 제공하여 보안에 강하다.
다. WPA는 RADIUS, Kerberos 등과 같은 다른 인증서버와 호환 가능하다.
라. WPA2는 2세대 WPA로써, RSA에 기반을 둔 CCMP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다.
마. EAP 인증 방식은 WPA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WPA2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DoS 공격의 대응 방안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UDP Flooding 공격 : 불필요한 서비스를 비활성화 한다.
나. SYN Flooding 공격 : 공격 인정 시간 내에 SYN 개수가 공격 인정 횟수 이상인 IP 주소를 소스로 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차단한다.
다. Ping of death 공격 :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일정 수 이상의 ICMP 패킷을 무시하도록 설정한다.
라. LAND 공격 :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자신의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IP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차단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스니핑(Sniffing) 공격을 수행하는 스니퍼를 탐지하는 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유인(Decoy)을 이용한 탐지 : 관리자가 가짜 ID와 패스워드를 네트워크에 계속 뿌리고, 공격자가 이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접속을 시도할 때 스니퍼를 탐지하는 방법
나. ARP를 이용한 탐지 : 정상적인 ARP Request를 보냈을 때 위조된 ARP Response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모니터링하여 탐지하는 방법
다. ping을 이용한 탐지 :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는 MAC 주소로 위장하여 ping을 보냈을 때, ICMP Echo Reply를 되돌려 보내는지를 모니터링하여 탐지하는 방법
라. ARP Watch를 이용한 탐지 : MAC 주소와 IP 주소의 매칭 값을 초기에 저장하고 ARP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변하게 하는 패킷이 탐지되면 알려주는 툴인 ARP Watch를 이용하여 탐지하는 방법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격은?

개인 단체, 정치 단체, 국가, 산업체 등 목표 조직을 타깃으로 하여 다양한 보안 위협을 만들어 침해에 성공해 정보를 유출하거나 장기간의 접속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또는 장기간의 접근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공격이다.

- ①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②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③ Ransomware
④ Zero-Day Attack

19. 다음 중 DDoS 공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DDoS 공격에 사용된 좀비 PC는 악성코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스스로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나. DDoS 공격의 구성 요소로는 공격자, 마스터, 핸들러 프로그램, 에이전트 등이 있다.
다. 트리누(Trinoo), TFN 등이 대표적인 공격 유형이다.
라. DDoS 공격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끼리 형성된 네트워크를 봇넷(Botnet)이라고 한다.
마. 라우터의 Egress 필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 다음 중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당한 절차로 인증을 받은 사용자의 세션을 가로채는 공격이다.
나. 패킷의 유실과 재전송이 증가해 서버와의 응답시간이 길어진다.
다. 공격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기존 세션을 동기화 시킨다.
라. 암호화, 지속적인 인증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술은?

과거 IP 관리 시스템에서 발전한 솔루션을 말한다. 이 기술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IP가 무질서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아, 가용 IP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IP 충돌로 인한 문제를 막아준다.

- ①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 ② NAC(Network Access Control)
- ③ VLAN(Virtual Local Area Network)
- ④ VPN(Virtual Private Network)

22.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와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IPS는 침입 공격에 대하여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다.
- ② IPS는 호스트의 IP 주소, 포트번호, 사용자 인증에 기반을 두고 외부 침입을 차단한다.
- ③ IDS는 침입 공격에 대하여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다.
- ④ IDS는 해커의 공격이나 정보유출이 탐지되면 해당 기능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

23. IPSec의 프로토콜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 ② Security Association
- ③ 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 ④ Authentication Header

24. 다음 중 네트워크 스캔(Network Sca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TCP FIN 스캔은 TCP 헤더 내에 FIN 플래그(flag)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Half-open 스캔 방식에 속한다.
나. TCP Full Open 스캔은 포트가 열려 있는 경우, 대상시스템 으로부터 SYN+ACK 패킷을 수신하면 RST 패킷을 보내 연결 과정을 중단한다.
다. XMAS 스캔은 스텔스(Stealth) 스캔에 속한다.
라. XMAS 스캔은 패킷의 모든 플래그를 NULL로 설정하여 전송한다.
마. NULL 스캔의 대상이 포트가 닫혀 있을 경우 RST 패킷이 돌아온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메일의 헤더 정보, 제목, 메시지 내용의 특정 단어 및 문장 패턴을 검색하여 스팸 메일을 탐지 및 차단하는 기술적 대응 방안은?

- ① 콘텐츠 필터링 ② 발송량 기준 차단
- ③ 송신자 필터링 ④ 시간대별 차단

2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DNS 보안 위협은?

보안이 취약한 DNS 서버에 조작된 쿼리를 전송하여 DNS 서버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 캐시(Cache) 정보를 위·변조하는 공격이다. 이 공격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사이트로 접속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① DNS Cache Poisoning 공격
- ② Bind DNS 서비스 방해 공격
- ③ DNS Spoofing
- ④ DNS Sinkhole

2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일종의 가상머신 안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원래의 운영체제와 완전히 독립되어 실행되는 형태를 말한다 또한, 컴퓨터 메모리에서 애플리케이션 호스트 시스템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작동하는 것이 허락된 보호받는 제한구역을 가리킨다.

- ① Sandbox ② Bluebox
- ③ Middlebox ④ Whitebox

28. 웹 취약점 및 공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령 삽입 취약점 :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전송 받은 인수에 특정 명령을 실행하는 코드를 포함시켜 웹서버에 전송하는 것
- ② XSS(Cross Site Scripting) 취약점 : 공격자에 의해 작성된 스크립트가 다른 웹사용자에게 전달되어 수행되는 것
- ③ CSRF(Cross Site Request Forgery) 취약점 : 브라우저를 통해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과 목록을 나열하는 것
- ④ SQL Injection 공격 :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입력값을 조작하여 DBMS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반환하도록 하는 공격 기법

29.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WEB 공격 유형은?

입사 지원을 위한 채용 사이트에서는 지원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 입사 지원 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을 숫자로 된 단순 아이디 값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격자는 지원자 별로 할당된 숫자 아이디 파라미터 값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타인의 입사지원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 ① SQL Injection 공격
- ② 사회공학 기법
- ③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
- ④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30.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SET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RSA 암호화를 사용하여 속도가 빠르고, 강력한 보안을 제공한다.
- ② 기존의 신용카드 기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전자지갑 소프트웨어를 요구한다.
- ④ 신용카드 트랜잭션을 보호하기 위해 기밀성, 인증 및 메시지 무결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자서명 방식은?

고객의 지불정보가 판매자를 통하여 해당 지급정보 중계기관으로 전송됨에 따라 고객의 지불정보가 판매자에게 노출될 가능성과 판매자에 의한 결제 정보의 위·변조 가능성을 제거한다.

- ① 부인불가 서명 ② 이중 서명
- ③ 은닉 서명 ④ 위임 서명

32. 재해복구 시스템은 복구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콜드 사이트(Cold Site) 복구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 ① 주 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자원을 원격지에 구축하고, 주 센터와 재해복구센터 모두 운영(Active) 상태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② 주 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자원을 대기 상태로 원격지에 구축하여 주 센터 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센터의 정보 시스템을 운영(Active)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③ 데이터만 백업하여 원격지에 보관하고, 업무 재개를 위한 정보 기술자원은 확보하지 않거나 또는 장소 등 최소한의 자원만 확보한 후, 재해 시 백업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식
- ④ 핫 사이트와 유사하나, 주 센터와 동일한 정보기술자원을 보유하는 대신에 중요성이 높은 자원만 부분적으로 재해복구 센터에 보유하는 방식

33. 다음 괄호 안에 해당하는 국제 표준은?

()은(는) 과거 BS7799 Part01에서 ISO/IEC17799를 거쳐 현재는 국제 표준이 되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수립, 구현 및 유지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지침 및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① ISO/IEC 27000 ② ISO/IEC 27002
- ③ ISO/IEC 27004 ④ ISO/IEC 27006

34.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ISMS 인증 제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20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② 인증 심사 기준은 정보보호관리과정과 정보보호대책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③ 모든 기업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신청하는 자율 제도로 운영된다.
- ④ 국가정보원이 평가하여 인증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35. 다음 중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에서 발표한 OWASP TOP 10 - 2017에 해당되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인젝션 나. 취약한 인증
다. 민감한 데이터 노출 라. XML 외부 개체(XXE)
마. 크로스 사이트 요청 변조(CSRF)
바. 안전하지 않은 역직렬화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명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전담반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 ②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③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분석센터
- ④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기업

37.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개인정보 보호 인증 취득
- ②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③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④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개인정보처리의 위탁기관명
-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 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서 통지 및 신고 시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나. 유출등의 공격에 대한 분석 내용
다.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라.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 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다.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사람이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마.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기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정형화된 것을 말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